

## 식물노조법 환노위 상정시 무기한 총파업 논의

### 공공 등 산별연맹도 총파업 결의 ...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물결 만든다

자유한국당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해 식물노조를 만드는 법을 발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직장검거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중장기 관점으로 정비 ▲파업시 대체근로 포괄 금지 규정 삭제 소수 의견 제출 등 자본이 요구하는 개악안을 국회가 논의할 구실을 주는 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산별노조연맹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임시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비롯해 ‘식물노조법, 파업과괴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악을 논의하면 즉시 총파업을 벌여 대응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 ‘노동조합법과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을 포함해 1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악안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의 개악안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 4주 이내 파업권만 인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입법 요구안을 자유한국당이 고스란히 받아 국회에 발의한 셈이다. 하나같이 민주노조의 힘을 빼고, 사용자의 현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조 할 권리에 맞서 기업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하면?

현행 노조법은 쟁의기간 중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해서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파업을 이유로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새로 채용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멈춘 업무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측이 쟁의행위 기간에 생산현장에 마음대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파업 효과가 사라진다. 사용자가 노조와 파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사 간의 균형이 무너져 현장에서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뿐 아니라 집회나 선전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업장 점거, 집회, 선전전 등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항의행동이 모두 불법이 된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팻말 하나 들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자유한국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찬반투표 공고시 ‘파업형태파업기간 명시’, ‘파업 찬반투표 부결 시 6개월 내 동일 사유 재투표 금지’, ‘찬반투표 효력 60일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금도 복잡한 파업절차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파업형태와 파업기간을 사전에 명시하고 찬반투표 효력을 60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노조의 전술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려는 내용이다. 파업하기 어렵고, 파업을 한다 해도 사용자가 노조의 전술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 쉬워진다.

자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로 노동조합의 손발은 묶어 놓는다. 하지만, 사용자는 제멋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파괴해도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용자가 자신이 지배개입 하는 어용노조에 임금과 지원을 몰아주고, 민주노조 조

합원을 표적 삼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으로 최대 2년이다. 자유한국당과 경총은 교섭비용 줄인다는 핑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3년 이상 장기간 묶는 장치로 작동한다. 민주노총은 변화하는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단협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거나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행위, 사용자단체 결성과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까지 위법으로 규정한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부, 지회가 산별교섭을 위해 사용자에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몰 수 있다.

### 노조의 대응은?

금속노조는 4월 16일 4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악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원회가 열리는 첫 날 18만 전 조합원의 2시간 이상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안이 고용소위에서 합의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면 비상중집을 소집해 무기한 총파업과 세부 파업 전술을 논의한다> 총파업 전술을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 연맹들은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

다. 민주노총은 4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 입법을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노동법 개악안 논의를 시작하면 즉각 국회 앞에 집결해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공식입법 논의 과정에 오르면 총파업으로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와 투쟁계획을 이견 없이 승인했다.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가 무르익고 있다.

# 노조참여 산재 예방 활동 현장, 재해율 50% 낮아

사측, 여전히 ‘근로자 불안정 행동’ 등 산재 원인 몰아... 산보위 실질화로 산재 예방해야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직접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신창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4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토론회에서 제조업 현장의 산업안전 보건 활동 노동자 참여 실태에 관해 증언했다. 학교와 건설 현장 등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 다스이산지회, 노동자 참여로 현장 안전문제 개선

이준우 금속노조 충남지부 다스이산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지회가 노·사 공동으로 진행한 위험성 평가 과정과 내용을 소개했다. 지회는 부서별로 위험성 평가 실행위원을 구성하고 기초자료 준비, 예비조사 등 6단계의 사전 준비 과정을 밟았다. 실행위원들은 현장을 돌며 준비한 점검표에 맞춰 각 공정과 작업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들을 파악했다.

다스이산지회 위험성 평가는 금속노조가 만든 기준과 방법, 관리카드로 진행했다. 실행위원들이 발견한 유해 위험 요인들은 부서 전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1차로 현장을 개선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개선되지 않았거나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작업을 했다.

다스지회는 2017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벌이고 있다. 2018년 단체협약에 “노동재해의 근본 예방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회 위험성 평가 실행위원 24명의 회의참여와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준우 노안부장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개선해야 할 유해 위험요인이 많아 업무가 나지 않았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조합원들이 수시로 현장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에 조합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줄었다”라고 밝

했다.

**소수노조, 투쟁으로 노동자 안전 지킨다**

2013년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율은 금산공장이 0.99%, 대전공장이 0.74%였다. 절반 규모의 금호타이어 공장들보다 산재율이 1/5도 안 되는 ‘놀라운’ 산재 발생 비율이었다.

오동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한국타이어의 낮은 산재율의 비밀은 “일하다 아프거나 다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라고 꼬집었다.

오동영 부지회장 증언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사측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인사고과 D등급을 준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하면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 근골격계로 산재 승인을 받는데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불승인 시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판결 처분을 받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 기간 노동자의 생계를 압박, 산재 신청을 막으려는 꼼수이다.

오동영 부지회장은 “회사는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노동자들을 공상과 산재로 구별해 차별한다.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노동자들만 회사가 실시하는 체력장을 통과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폭로했다.

지회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자 2017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산업안전보건 문제 해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정 TFT를 제안했다. 지회는 수차례 논의 끝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노사정 TFT에 참여했다.

그러나 노사정 TFT는 형식적 운영으로 파행하고 급기야 또다시 금산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회는 즉각 전면 작업중지와 해제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하며 노동부 앞 농성에 들어갔다. 사측 환경안전 실무자

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교섭 대표인 한국노총 고무노련 산하 노조와 지회로 구성된 노사정TFT를 다시 꾸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오동영 부지회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측과 노동부가 많은 제약을 가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지속해서 현장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정유정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은 “장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 활동 노동자 참여는커녕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고 예방 지침 등 업무설명서조차 없는 현실이다” 라고 지적했다.

함경식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노동안전위원장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함경식 위원장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체, 그 밑으로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작업탑장(일명 삼장)을 고용하고 그 밑에 다시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98%에 이르는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들은 산업안전 문제에 참여할 통로가 전혀 없다” 라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만 6570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554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 통계 외에도 공상 처리한 산업재해까지 포함하면 통계치는 수십 배 넘게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사업장 0.25%에 불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업안전공단 연구보고서 ‘근로자 참여와 산재 발생 관련성 연구’에 따르면 산재 예방 활동에서 외생 잠재요인에 의한 감소율은 -0.01인데 비해 노동자가 참여할 경우 산재 발생률은 -0.09로 감소한다” 라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활동에 노동자가 참여하면 효과가 아홉 배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와 산재 발생률의 관련성 연구 결과를 보면 유럽연합 EU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24% 낮게 나타났다. 노사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재해율이 50% 낮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40%가 낮았다.

유럽연합 안전보건청이 유럽 31개국 안전보건관리자와 노동자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재 발생률과 직업위험도가 낮아진다” 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명선 총연맹 노안실장은 “한국기업들은 여전히 노동자를 부속품으로 여기는 전근대 인식을 하고 있어 노동자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를 현장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주체로 세우기 커녕 모든 사고 보고서에 ‘근로자의 불안정 행동’ 을 꼬리표처럼 붙여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최명선 노안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실질화 하는 방법으로 ▲본사 차원의 산보위 설치 제도화 ▲산보위 심의 의결 안전실질화 ▲하청노동자가 참여하는 원·하청 산보위 구성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36만 7천 186개 사업장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6,646개로 전체 사업장의 0.25% 수준에 불과하다.